
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

2021. 11. 23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. 추진 배경	1
----------------	---

II.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	1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II. 주요 내용	3
------------------	---

1.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맞춤형 지원	3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2. 고용 취약계층 등 지원	5
-----------------------	---

3. 서민 물가안정 · 부담경감 지원	6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4. 돌봄 · 방역 지원	6
---------------------	---

〈 별첨 〉 손실보상 非대상업종 지원방안 (별도 배포)

I. 추진 배경

- 강한 경제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부담 경감 추진
 - 특히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 보장 및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 맞춤형 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필요
-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, 자산시장 요인 등으로 추경예산 314.3조원 대비 약 +19조원 내외의 초과세수 발생 전망
 -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·적극적 재정운용 등으로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실현 ☞ 법인세, 부가가치세 등 증가
 - 경제회복과 맞물린 자산수요 증가 ☞ 양도소득세, 증여세 등 증가

II.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: 12.7조원+ α *

*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 등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

- 기금계획 변경 등 행정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단과 방안을 총동원하여 12.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·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
 - (내용) ①소상공인 지원 10.8(손실보상 1.4 + 非대상 업종 9.4), ②고용 취약계층 등 1.4, ③서민 물가안정 0.4, ④돌봄·방역 0.1조원 등
 - (재원) 초과세수 5.3조원 外 기금변경·자체재원 등 0.9조원, 소상공인·관광융자 금융지원 조건 개선 6.3조원 등 활용

※ 금년 초과세수 활용 방안

- ① 우선 소상공인·취약계층을 위한 금번 대책 재원으로 5.3조원 활용
- ② 국채시장 안정 및 채무 감축을 위해 국채발행 2.5조원 축소
- ③ 그 외는 내년 세입세출 결산 後 세계잉여금 발생 시(4월초)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라 처리(지방교부세 등 정산, 채무상환, 차년도 세입 이입)

참 고

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주요 내용

규모

민생경제 재정지원 12.7조원+ α

[대책 규모] [초과세수 활용]

주요 내용

합 계	12.7조원	5.3조원
-----	--------	-------

① 소상공인 지원	10.8조원	3.5조원
-----------	--------	-------

① 소상공인 손실보상	1.4	1.4
-------------	-----	-----

②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 지원	9.4	2.1
▶ 금융 지원	8.9조원	2.1조원
▶ 부담 경감	0.4조원	85억원
▶ 매출 회복	0.1조원	-

② 고용 취약계층 등 지원	1.4조원	1.4조원
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

▶ 구직급여	1.3조원	1.3조원
▶ 직업훈련	841억원	841억원
▶ 건강진단 · 산재예방	74억원	-
▶ 청년 금융지원	90억원	-

③ 서민 물가안정 · 부담경감 지원	0.4조원	0.4조원
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

▶ 농축산물 가격안정	3,800억원	3,800억원
▶ 저소득층 · 도서지역 연료비	332억원	-

④ 돌봄 · 방역 지원	0.1조원	0.1조원
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

▶ 돌봄지원	936억원	936억원
▶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	196억원	196억원

Ⅲ. 주요 내용

1

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맞춤형 지원 : +10.8조원

- ◇ 「소상공인지원법」 개정법률(10.8일 시행)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**손실보상 신속지급**(10.27일~)
- ◇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은 **맞춤형 패키지 추가 지원방안 마련**

1) 소상공인 손실보상: +1.4조원

-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의 '21.3분기 손실보상(약 80만명, 2.4조원)을 위해 **+1.4조원 추가 지원** * '21.2차 추경 既확보 1조원
* 집행현황(11.22일): (신청) 신속보상 54만개, 확인보상 14만개, (지급) 52.7만개, **1.5조원**

2) 손실보상 非대상업종 맞춤형 추가 지원: +9.4조원

- ①금융지원, ②비용부담 경감, ③매출회복을 패키지로 非대상 업종 공통지원 및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병행
- ① (**금융지원, 8.9조원**) 인원·시설이용 제한 업종 대상, 초저금리(1.0%) 대출(한도 2천만원) 「일상회복 특별융자」 신규 공급(10만개, 2.0조원)
 - 기존 코로나 특례보증, 저산용 특별융자 등 대상 한도(1~2천만원) 확대(2.0조원)
 - 여행업 등 관광융자*(3.6조원) 금리 최대 1%p 감면 + '22년 상환유예(0.3만개)
* (당초) 1~2%대 저금리, '21년말까지 유예 → (변경) 0.5~1%p 인하, '22년말까지 유예
※ 소진융자('21.10~'22.3월말 상환기일 도래) 6개월간 상환유예(0.1조원) 既조치 포함
- ② (**부담경감, 0.4조원**) 인원·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(14만개) 및 손실보상(80만개) 대상 2개월간 ①전기료 50%·②산재보험료 30% 지원
* (효과) 업체당 최대 20만원, (소요) 기정예산·기금재원 0.2조원 활용
 - 손실보상 非대상업종 소규모 사업자 5만명 대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('21.11→'22.2→'22.5월말)
 - 공연업 보조인력 4천명 등 인력 채용, 전시업 행사 개최, 체육·유원 시설·결혼·장례식장 방역 물품 지원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(약 0.1조원)

- ③ (매출회복, 0.1조원) 문화·체육·수련시설 이용권*(약 500억원) 등 지급
 * (문화누리) 210→263만명, (스포츠강좌) 7.8→8.6만명, (수련시설) 38만명 신규
 - 동행세일의 조기 개최를 추진하여 지역상권 매출 회복 뒷받침
 * 동행세일 개최시기: ('20) 6.26~7.12일 → ('21) 6.24~7.11일 → ('22안) 5월초

【 소상공인 非대상업종 3대 분야 8대 패키지 지원방안 】

전체 규모	9.4조원 * 既 발표 포함시 11.6조원	
금융 지원	8.9조원 * 既 발표 포함시 9.3조원	<p>① 일상회복 특별융자* 2.0조원** 신규 공급 '21년 * (대출조건) 인원·시설이용 제한업종 10만명 대상 2천만원 한도, 금리 1.0% ** (재원) 초과세수 1.5조원 + 기정예산(소진기금 변경) 0.5조원</p> <p>② 긴급대출 6.3조원* 프로그램 대상·한도 확대** '21/22년 * (대상자금) '21 소상공인 긴급대출 2.0 + '22 관광융자 3.6 + '22 희망대출 0.7 ** (조건개선) 인원·시설이용 제한업종 포함 + 대출한도 1→2천만원 확대 등</p> <p>③ 관광융자 금리 최대 1%p 인하 + 1년간 상환유예* 체육융자 규모 확대 + 1년간 상환유예 '22년 * (기존금리) 1~2.25%, (재원) 초과세수 0.5조원 ※ (既 발표) 소진융자 상환유예 0.1조원(초과세수 활용)</p>
부담 경감	0.4조원	<p>④ '21.12~'22.1월간 전기료·산재보험료 최대 20만원 경감 '21년 * (대상) 손실보상 80만 + 非대상업종 14만 (재원) 기정예산 0.1조 + 산재기금 0.1조</p> <p>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 '22년 * (대상) 5만명, (추가 연장기한) '22.2→5월말, (세정지원 효과) 0.1조원 전망</p> <p>⑥ 공연분야 4천명 인력 채용, 지역특화전시회(40회) 등 행사 개최, 체육·유원시설, 결혼·장례식장 방역 물품 지원 '21/22년 * (재원) 초과세수 활용 85억원, '22년 예산 등 총 0.1조원</p>
매출 회복· 수요 보장	0.1조원 * 既 발표 포함시 1.9조원	<p>⑦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3종 패키지* 1.8조원 신속 집행 '21년 + 동행세일 조기 개최(6월말→5월초) '22년 * (규모) 지역사랑상품권(1.1조원), 온누리상품권(0.4조원), 상생소비지원금(0.3조원) ** '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(정부안 6조원)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검토</p> <p>⑧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소비 촉진 지원 + 저소득층 등 대상 문화·체육·수련시설 바우처 지급 확대*(약 500억원) '22년 * (재원) '22년 예산 등 0.1조원</p>

- (구직급여) 고용시장의 코로나 영향 지속*을 감안하여 연말(11~12월) 구직급여 지원을 위한 +1.3조원 고보기금 재정 보강(19.6만명)

* 코로나 지속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11월말 구직급여 기정예산 소진 예상

- (직업훈련)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, 실업자·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48→ 54.5만명 확대(+841억원, 고보)

구 분	당초 지원대상	추가 확대(+α)
계	48만명	6.5만명
실업자훈련	21.2만명	3.4만명
재직자훈련	18.8만명	2.8만명
국기훈련	8.0만명	0.3만명

- (건강·산재 예방)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진단, 안전확보 지원

-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(30인 미만 사업장)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* 비용지원 확대(9만명, +51억원)

* 산업안전보건법은 중금속,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, 사업주는 진단결과에 따라 작업 전환, 설비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

-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조·서비스업* 등 산재예방기술지도 추가실시(3만개, +23억원)

* 건물외벽청소, 건물관리, 배달 등 고위험 서비스업 대상

- (청년 금융지원) 저소득 청년 생활자금 저금리(연 3~4%) 융자 지원을 위해 햇살론^{youth}* 공급 0.34→ 0.4조원 확대(1.6만명, +90억원)

* 지원대상 : 만 34세 이하&연소득 3,500만원 이하인 미취업 청년·대학생·사회초년생
지원한도 : 연 6백만원 (1인 최대 1,200만원)

3

서민 물가안정 · 부담경감 지원 : +0.4조원

- (농가·식품업체 자금지원)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채소 계약재배, 식품기업 원료 및 농가 사료매입 등 자금지원 확대 (1.5만 농가, +3,800억원)
 - * (농안기금) 계약재배(1.1만농가, 1,158억원) + 원료매입자금(160개 업체, 642억원) 등 1,800억원
 - (축발기금) 농가사료매입자금(4천농가 × 5천만원) 2,000억원
- (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) 최근 유가 상승 등을 감안, 저소득·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을 위해 지급단가 8.2%(10.9→11.8만원) 인상 (87.8만가구, +79억원)
- (도서지역 연료비)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도서 자가발전시설의 노후설비 정비 및 연료비 등 추가 지원 (3.9만호, +253억원)
 - 백령도·대청도 설비증설, 평도·안마도·호도·죽도 보수·증축 등 도서지역 노후 설비 교체·지원 반영(+88억원)
 - 연초 대비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추가 반영(+111억원) 등

4

돌봄 · 방역 지원 : +0.1조원

- (돌봄지원)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추가 지원(1.5만명*, +0.1조원)
 - * 육아휴직 12→ 12.5만명(+5천명), 근로시간 단축 0.8→ 1.8만명(+1.0만명)
- (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) 일상회복 전환 단계의 방역대응, 재택치료 관리 등을 위해 한시적 인력 지원 연장 (약 2,100명*, +196억원)
 - * 전국 258개 보건소에 개소당 의료종사자 및 행정인력 8명 한시 지원